

제6장 연구윤리

제27조(목적) 본 장은 학술지 발간과 관련하여 논문투고자, 편집위원, 심사위원이 준수해야 할 연구윤리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8조(연구부정행위의 정의 및 적용범위) ①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연구논문을 집필하는 과정에서 행한 위조·변조·표절·중복게재·부당한 저자 표시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중복게재”라 함은 자신이 이미 발표(게재)한 저작물과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선행 저작물의 출간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다시 발표(게재)하는 행위를 말한다.
5. “부당한 저자 표시”라 함은 기여 없는 저자를 공동저자 또는 명예저자로 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6.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7. 타인에게 상기의 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 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8. 그 밖에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② “제보자”라 함은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연구원에 알린 자를 말한다.

③ “조사대상자”라 함은 제보 또는 연구원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29조(연구윤리의 기준) ① 논문투고자가 준수하여야 할 윤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투고자는 제24조에 제시된 연구부정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2. 투고자는 <별표 1> 제주여성가족연구 논문작성요령에 따라 참고문헌의 인용 등에 대하여 그 사실을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3. 투고자는 편집위원회의 의견과 심사결과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편집위원회가 준수하여야 할 윤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의무) 편집위원회는 투고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2. (차별금지) 편집위원회는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을 투고자의 성별, 나이, 소속기관은 물론이고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도 무관하게 오로지 심사 기준과 절차에 근거하여 공평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3. 공정한 심사의뢰

가.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나. 편집위원회가 투고된 논문을 심사의뢰 시 투고자를 알 수 있는 사항을 제외한 논문의 내용만을 심사위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4. (비밀준수) 편집위원은 심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투고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이를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본인의 동의를 받거나 한국연구재단의 학술지 평가에 관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그 밖에 법령에 따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심사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성실한 심사

가. 심사위원은 학술지의 편집위원회가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지침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나. 심사위원은 심사대상 논문의 내용을 평가할 수 없는 경우에 지체 없이 편집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2. 공정한 심사

가. 심사위원은 심사 의뢰된 논문에 대하여 심사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나. 심사위원은 심사 의뢰된 논문에 대하여 게재불가 판정을 한 경우에 그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3. 투고자에 대한 존중

가. 심사위원은 전문 지식인으로서 투고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나. 심사위원은 심사의견서를 작성함에 있어 가급적 정중하고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하고,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도 함께 설명하여야 한다.

4. (비밀준수) 심사위원은 심사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논문에 대한 적정한 평가를 위해 반드시 조언이 필요한 경우 이외에는 이를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논의하여서는 안 되며, 투고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다.

제30조(연구윤리의 위반 제기, 조사 및 조치) ① 학술지 발간과 관련하여 본 연구윤리를 위반한 의혹이 있는 경우, 제보자격에 제한 없이 본지의 편집위원장 또는 편집위원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할 수 있다.

② 편집위원장은 의혹 제보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되며, 신원 비밀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편집위원장 및 본지의 발행기관인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은 의혹 제보자가 신분상 불이익이나 외부의 압력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제31조(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역할) ① 학술지 발간과 관련하여 제30조제1항에 대한 보고가 제기된 경우, 편집위원장은 이를 연구윤리위원회에 보고하고 원장은 연구윤리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연구윤리위원회의 소집, 의결, 연구부정행위의 검증, 조사 등에 대해서는 「재단법인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연구윤리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2조(제재조치) 연구윤리위원회에 의해 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제재조치를 취한다.

1. 표절 판정을 받은 논문의 저자는 이후 일정 기간 단독 또는 공동으로 본 학술지에 논문투고를 할 수 없다.

2. 편집위원장은 표절 판정을 받은 논문에 대해서 홈페이지 등에 그에 관한 사실을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편집위원장은 본 업무가 종료된 후 30일 이내에 표절 판정 및 제재조치와 관련된 세부사항을 한국연구재단에 통보할 수 있다.

4. 표절 이외의 위반 판정에 대해서는 연구윤리위원회에서 결정한 제재조치를 따른다.

5. 연구윤리와 관련하여 본 규칙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은 「재단법인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연구윤리 규칙」에 따른다.

제33조(기타) 본 규칙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은 편집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